

FTA의 의의 및 우리나라 FTA 체결의 주요 내용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학박사

1. 서론

세계적으로 WTO DDA 프로세스가 무기 연기된 가운데, FTA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필두로, 싱가포르(2006년 3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6년 9월), 그리고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상품부문 협정을 타결, 올 해 6월부터 발효 중에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 또는 지역 경제로는 양국 국회와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와 함께 EU(2007년 9월 17~21일간 3차 본협상), ASEAN(투자, 서비스 협상 진행 중), 캐나다(2007년 9월 11~14일 2차 상품분야 실무협상), 인도(2007년 CEPA 회기기간 회의) 등이 있다. 이처럼 금년 들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경제적 목표 이외에도 정치·외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 비전과 전략적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평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1년 2개월 만에 타결이 되고 지난 9월 7일 한국 정기국회에 비준안 동의가 제출되어 있는 한미 FTA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15개국과의 FTA보다 사실상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가져다주는 파급효과가 더욱 심대하다고 볼 때, 한미 FTA의 의의와

주요 체결 내용 및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법률 개정 등 정부의 후속 종합대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은 향후 한국 정부가 EU, 캐나다 등과의 FTA 추진에 있어 또 다른 협정문안 작성을 위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할 때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어느 FTA보다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미 FTA를 비롯해서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들은 한국경제의 수출증대나 외국인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촉발하고, 내수시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미 FTA와 최근 글로벌화 추세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정의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한국정부의 동맹외교는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한국의 동북아 경제 허브 전략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 강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한미 FTA를 협상기간 내내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FTA 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유무역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처럼 FTA를 통한 글로벌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볼 때 성급하고 감성적인 찬성과 반대의 논의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이해득실에 집중되기 쉬운 논의의 초점을 장기적인 국가비전 차원의 논의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정부가 향후 임해야 할 FTA 협상과정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한미 FTA 최종 협정문을 기준으로 각국별 쟁점 사안, 유보 및 양보를 할 수 있는 최저선 설정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멕시코의 경우 내부 개혁에 실패하면서 NAFTA 가입 효과가 조기에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48개국과 넘는 FTA를 추진하였지만 2001년을 정점으로 수출경쟁력 증가 효과는 소멸되고 내수성장도 확충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은 NAFTA 이전 수준 이하로 급락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의 성급한 개혁이 수출 중심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기반 강화에 실패함으로써, FTA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FTA 자체 뿐 아니라 향후 추진 중인 동시다발적 FTA 이후의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보호 및 간섭을 폐지하고, 대외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과 퇴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방의 물꼬가 트인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FTA는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국내 시장을 개방하는 것과 함께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향점을 해외로 넓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수혜자와 피해자로 달리 구분되지 않는다. 정부는 관세수입,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기업은 경쟁력 제고에 더욱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어찌 보면 FTA의 수혜자는 가계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상품이 저가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국내시장 개방에 이은 기업은 외국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며, 그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할 경우, 고용불안, 소득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작은 그림, 그리고 채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전략 수립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10년을 내다보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제 2의 르네상스'를 꿈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이미 한국정부가 타결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FTA 가운데 가장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를 중심으로 그 체결 의의와 주요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FTA 시대의 개방화와 한국경제의 대응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한미 FTA의 체결의 의미와 비준 전망을, 제 3장은 한미 FTA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을 요약하고 제 4장은 한국경제의 대응 전략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FTA 체결의 의의

한국의 '동시 다발적 전방위 FTA' 체결은 협상 상대국과 과세철폐 및 교역량 증가라는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국은 개방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근대 한국사에서의 개방은 대부분 외세에 의한 강압적이며 수동적 자세를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과의 강제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19세기말 조선 말기의 개항은 근대적 서구 문물의 수용이라는 본래 의미가 크게 약화된 것이었다. 아울러 현대에 들어와서도 1980년대 말 이전에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방정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2004년 4월 발효되었던 한·칠레 FTA를 시발점으로 최근 한미 FTA와 이후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과의 FTA 체결 전략은 한국이 그동안 보여 왔던 수동적 접근법에서 능동적인 FTA 추진으로 그 전략이 수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미 FTA는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다. 지난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은 경제동맹 체결로 한미 양국간 심리적 거리가 단축되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가 확산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전략 마련은 200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당시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 자문회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 7월 23일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미·중·아세안과 3~5년 내 FTA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FTA를 추진함에 있어 한국정부는 대통령 훈령 제 121호인 'FTA 체결절차 규정'에 따라 FTA의 추진 목적, 즉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상호보완성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FTA 추진의 목적과 의의를 몇 가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FTA 추진 의의는 크게 정치·경제적 의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의의부터 살펴보면, 첫째, 무엇보다 능동적 개방화인 FTA를 통해 한국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1997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2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다. FTA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얻는다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미수출 경쟁력 강화 등 대외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2006년 대미수출 증가율은 4.5%로 2001년 이후 6년 연속 한국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수입시장의 점유율도 1995년 3.3%에서 2006년 2.5%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그 자리를 중국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은 2004년 이후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제2~3의 수출시장으로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향후 한국정부가 미국, EU 등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한국 기업의 선진시장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FTA는 문화,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 유발로 내수시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소비가 내수로 전환되는 서비스 부분의 수입대체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21세기 후기산업사회의 초기 경제는 종전의 제조업 중심의 'hard economy' 시대에서, 지적서비스 산업 중심의 'soft economy'로 이전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Symbol economy'의 FTA로 인한 경제적 목적 이외에 정치·외교적 목적도 포함

하고 있다.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은 FTA를 통해 그동안의 한반도 안보전략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유지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입이 증가할수록 한국경제의 위상제고는 물론 국가 위기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리스크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국제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FTA를 통한 경제적 공동연대라는 경제 외교적 측면과 함께 동맹 간의 결속 강화라는 정치 외교적 측면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미 유일 초강대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과,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동북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고자 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역할론이 부딪히고 있음을 볼 때, FTA는 한국과 나아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정치·경제학적 역동성이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3. 한미 FTA의 체결 의미와 비준 전망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협상과정에 있거나 체결을 한 FTA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 정부 FTA 전략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해 2월 3일 한미 FTA의 협상 출범과 함께 그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친 본 협상과 특히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 시한 내 체결을 위해 만기시점 수 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협상타결이 이루어지는 등 톡톡히 산통을 겪은 바 있다. 한미 FTA 최종 협정문 안에 지난 6월 30일 양국 정부의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현재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정부는 지난 9월 14일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미국 역시 20일 미무역거래위원회(ITC)의 한미 FTA 파급효과 보고서와 함께 미 의회에 제출할 '이행법안(implementation law)' 이 현재 정부 내에 다듬어지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FTA는 앞서 지적한 바 있는 한국 정부의 FTA 체결 전략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최종협정문 자체는 이미 EU가 한·EU FTA 본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FTA 최종 협정문의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미 FTA의 비준전망 및 체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한미 FTA의 비준 전망

한미 FTA는 의회 심의 등 일련의 비준 절차를 거쳐 양국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가 된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체결 안에 근거하여 최종 협정문을 이미 작성하였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회와 의회

를 통해 비준동의 절차의 밟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은 본회의에서 최종협정문에 대한 비준 동의를 표결하기 위해 이미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무역대표부가 협정문을 '이행법안(Implementation Law)'으로 편집해 의회에 제출하면, 90일 이내 이행법안에 대해 하원, 상원 순으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국회(의회)의 비준 동의 후 양국 정상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공표하면 즉시 발효된다.

한미 양국 모두 FTA 체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비준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피해업종 종사자들과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고려해 의원들도 입장표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한미 FTA 타결 직후 '실망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특히 자동차 및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보다 신속한 개방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은 노동 및 환경기준을 한미 FTA 협정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미국 산별노조(AFT-CIO)는 한미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 역외가공 인정, 핵심 노동기준의 미반영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미 FTA는 올 해 내에 비준되기보다, 빠르면 2008년 상반기, 그렇지 않으면 2009년 상반기까지도 늦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FTA 체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및 한미 FTA의 전략적 필요성 등으로 연내 비준 동의를 이루어질 가능성을 다소 높게 전망하였으나, 최근 대선정국과 때를 같이하여 한미 FTA는 국회의 관심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처리 기한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연내 비준동의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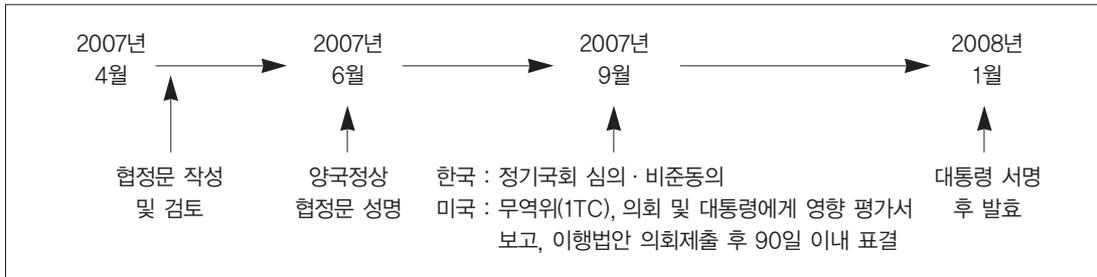
한미 FTA의 비준 동의 가능성

- 현재 총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비준 동의에 필요한 표결 수는 149명. 지난 4월 2일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찬성 210표)를 향후 FTA 비준 동의안 표결의 대리(proxy) 변수로 볼 경우, 연내 비준 동의 가능성은 70%로 다소 높게 볼 수 있으나, 현재 대선과 맞물린 정치일정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실질적으로 폐회된 상황
- 지난 6월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88명~106명) 수에 유보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수(112명~117명)의 50%를 포함할 경우 비준 동의를 이루어질 확률은 55% 수준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의 심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쇠고기 및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 정부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잔존함에 따라 사실상 연내 타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미 의회의 불만과 달리, 한미 FTA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90% 이상 전반적인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양국간 국회(의회)의 연내 비준 동의 절차(예상)



4.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미 FTA를 통해 한국경제의 전략적 포지션 가운데 하나는, 대미수출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비록 대미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경제에 중요한 시장이다.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은 2004년 이후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제 2~3의 수출시장으로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에서 한 발씩 밀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6년 대미수출 증가율은 4.5%로 2001년 이후 6년 연속 한국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2006년 총수출 증가율 14.4%)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시장의 점유율도 1995년 3.3%에서 2006년 2.5%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멕시코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5년 8.3%에서 2006년 10.7%로, 같은 기간 중국은 6.1%에서 15.5%로 각각 2.4%p, 9.4%p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미수출 경쟁력 둔화는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제품은 선전하였으나, 섬유제품 등 대다수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매우 부진했던 탓에 기인한다. 섬유제품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18.1%와 -14.3%로 큰 폭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한미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대미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MTI 3단위 기준¹⁾)의

1) MTI 코드는 옛 상공부에서 편의상 통계분류를 하기 위하여 부여한 코드로 대부분인 1단위부터 시작해 2단위, 3단위, 4단위, 6단위로 세분하고 있다.

경우 픽업트럭 등 신차개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상호간에 기술보완 가능성이 높은 기계부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미국의 수요가 큰 가공공작기계의 가격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제조업부문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은 한국경제의 지적 서비스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과 기술제휴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공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미래시장 개척은 물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다. 농업처럼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함께,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구조조정을 겪게 될 산업도 존재한다. 제약 산업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FTA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차별 관세 양허 안 등 협정문 안 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한미 FTA를 예로 들자면 현재 관세율이 높고,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부문(자동차, 섬유), 관세철폐 효과보다는 산업간 상호 보완적 구조로 인해 향후 협력증대 가능성이 큰 부문(기계),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업종 내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부문(제약), 그리고 실질적인 개방효과는 없지만 대미진출이 요구되는 부문(방송·통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많은 업종 가운데 이 처럼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업종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협정문 내용 및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1. 주요 업종별 타결 내용 및 파급효과

①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문 개방안은 현재 한·EU FTA에서도 미국과의 협정문안 보다 더욱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EU 모두가 한국 자동차 시장의 주요 시장으로써, 사실상 한국시장의 수입보다 한국기업의 수출이 많다는 점을 통해 불평등 경쟁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 최종 협정문은 향후 EU와의 협상에서도 매우 민감한 'Chapter'로 이견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제와 환경 및 안전기준 등에 한미 양국이 합의하였다. 최종 서명된 한미 FTA 협정 안에 따르면 한국은 친환경차(10년 유예)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부품은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하는데 합의하였다. 한국은 또한 특소세와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자동차 원산지규정, 안전·환경기준, 분쟁해결절차 및 표준협력에 대해서도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방어하는 가운데 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미 FTA의 자동차부문 관세 양허안

구분	즉시 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한국	승용차·부품 등 116 개 품목(8%)	-	-	친환경차 (8%)
미국	3000cc 이하 승용차·부품 등 18개 품목 (0~2.5%)	3000cc 초과 승용차 등 16개 품목 (0~2.5%)	타이어 (4%)	트럭 (픽업 포함) (25%)

주: () 안의 수치는 현행 관세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에 따른 한국의 자동차세제 개편

차종		경차 (800cc 이하)	소형차		중형차 (~2000cc)	대형차 (2000cc 초과)
			~1000cc	~1600cc		
특소세	현행	면제	5%			10%
	개편	면제		5%		8% (3년 후 5%)
자동차세	현행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개편	80원		"	200원	

자료: 외교통상부

한편, 이번 한미 FTA 자동차 시장 개발 로드맵에 따라 대미수출은 확대되지만, 발효 이후 곧바로 국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철폐로 한국산 자동차에 약 300~400달러대의 가격인하요인이 생겨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부품 관세철폐로 인해 부품수출도 확대되고, 현지생산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차는 미국과 FTA를 맺은 주변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병행²⁾할 경우 FTA 체결로 인한 한국차의 수출확대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관세철폐 및 세제개편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최대 12.7%까지 인하될

수 있어, 중대형 차급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에 대한 시장개방이 가시화 될 경우, 미국산 일본차와 유럽 차의 우회수입도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미국의 포드, GM, 클라이슬러 등 유력 자동차 업체들도 일본과 유럽 자동차에 대한 한국 내 시장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EU FTA를 미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거는 분야는 픽업트럭의 개발 및 세계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즉 25%에 달하는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용 픽업트럭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일본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산 픽업트럭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는 일정한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세인하와 수출증대에 따른 수익을 환경기술과 고급차 개발 및 판매망 확충 등에 활용하여 한국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급선무라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엔지니어링 비용과 중국 대비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허브로 육성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② 기계 산업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기계 산업은 미국기업의 부품 및 기자재 공급기지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개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일반기계 관련 품목 중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82.1%인 반면, 한국은 38.3%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품목별 유예기간 또한 가스터빈 3년, 머시닝센터금속절삭, 드릴링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대의 기계로 하는 공작 기계, 자동제어식 밸브, 볼 베어링 10년 등으로 한국 기계 산업의 시장개방 속도는 상당히 완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양국 기계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은 범용기계와 부품에 특화된 반면, 미국은 전용기계에 특화되어 있어서 상호보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기계 산업의 관세구조를 살펴보면 대미수출 품목 중 관세가 높아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가공공작기계의 경우,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2위의 가공공작기계 수입국으로 최근 4년간 국내기업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41.7%를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미 FTA 협상 결과 및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 KARI CEO Report, 2007.4.3.p 11.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대미수출액과 관세율

(단위: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출 금액(2006년)	평균 관세율
1	건설광산기계	643	0
2	섬유기계	479	1.1
3	가공공작기계	338	4.1
4	펌프·압축기	323	0.3
5	냉동건조기계	248	0.7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협회 DB, 산업연구원

주요 대미수입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전자응용 가공기계, 터빈 등은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일부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같이 미국에 비해 대미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기업으로의 수입선 대체나 미일 상호간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환경, 에너지 등 차세대 기계장치의 부품공급 기지로 성장도 가능하다. 현재 미국 기계 산업의 경우 원천기술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으나 일본이나 독일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산업 등의 부진으로 기계 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어 미국기업과 부품이나 제품개발 부문에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즉 태웅, 현진 소재 등은 GE등 풍력발전 선도업체에 기자재를 공급하고, 평산은 세계 풍력발전용 타워플랜지풍력발전기의 기동에 사용되는 강관과 강관을 연결하는 이음새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양국 기계 산업 간의 상호 보완적 역할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

③ 섬유산업

그동안 중국과 경쟁력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으면서, 사실상 사양 산업으로 여겨져 오면서,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을 가속화해 오던 섬유산업의 경우 한미 FTA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에서 섬유산업은 관세철폐, 원사기준(Yarn Forward)섬유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실(yarn)의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10년간 한시적 섬유 셰이프가드 도입 등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즉시 철폐 및 3년 이내 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85.4%, 미국은 즉시 철폐가 61.2%이고, 나머지 38.2%에 대해서는 각각 5년(18.6%)과 10년 이내(20.2%)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한미 FTA의 섬유부문 관세 양허안

구 분	한 국				미 국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1,387	(86.8%)	1,654	(61.2%)
3년	7	(0.5%)	32	(13.4%)	-	(-)	-	(-)
5년	24	(1.9%)	34	(14.6%)	149	(9.3%)	504	(18.6%)
10년	-	(-)	-	(-)	62	(3.9%)	548	(20.2%)
계	1,296	(100%)	236	(100%)	1,598	(100%)	2,706	(100%)

자료: 외교통상부

한편, 원사기준 충족이 어렵거나 원사공급이 부족한 품목(한미 FTA에서 원사 공급부족에 관한 협정)은 NAFTA형과 CAFTA형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후자는 발효 후 5년으로서 한정하였다(단 양국간 협의 하에 연장가능). 또한 원사공급 부족 품목에 대해 합의할 때 전자는 양국합의 하에, 후자는 수입국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철폐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섬유부문의 대미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철폐만으로 약 1억 8천만 달러의 대미수출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 관정제 도입 등으로 물류측면에서도 대미 수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산 섬유제품의 경우 차별화된 고가제품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산 섬유수입 규모는 전체 섬유수입액의 3.5%(2.4억 달러)로 극히 낮은 수준(2005년 기준)이며 만일 신소재부문의 기술유입이 확산될 경우, 제품의 고부가치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섬유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미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원사 → 직물 → 완제품'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생산 네트워크와 '직물 → 염색 → 봉제 → 컨버터 업체'로 연결되는 수출지향형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한편 제품 차별화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노려볼직하다. 즉, 우주·항공 등 신소재 섬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M&A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현지 로컬 유명 브랜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④ 제약 산업

한국 제약 산업은 한미 FTA로 인해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한국 바이오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한국 제약 산업의 경쟁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에서 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국제표준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타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업체가 품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개발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 정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미국 국내법은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30개월 자동정지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한국도 국내 제약 산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약속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의 품목허가 절차로 인해 식품조사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기간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이미 국내 특허법에 반영된 내용으로 한국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리지널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보호를 명문화하도록 함으로써, 신약 개발과정 중에 복제약이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FTA의 제약부문 관세 양허안

구 분	즉시 철폐	3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한국	원료의약품(7.1%)	완제의약품(8.0%)	-	-
미국	완제의약품(무관세) 원료의약품(3.1%)	-	-	-

주: ()안의 수치는 현행 관세
자료 : 보건 복지부

국내 제약 산업은 생산성이 높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특허권이 보다 강화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제네릭 의약품 업체 중 일부는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의 본 협상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에 정부가 한미 FTA 4대 선결요건으로 합의한 바 있는 약가등재 방식의 변화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큰 의약품만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선별등재' 방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다 공세적인 미국 시장 개척 전략도 필요하다. 제네릭 의약품 상호인증을 국내 제약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제약 산업이 국제 GMP 인

증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업체가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은 국제적으로 아직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증받지 못한 상태이나 국내 제네릭 의약품을 미국이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양국은 합의하였다. 따라서 오리지널의약품의 경우, 기존의 화합물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에 매달리기보다는 틈새시장인 바이오 신약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³⁾ 즉 국내의 수많은 바이오테크기업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미국 바이오제약업체의 M&A 등을 통해 시장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⑤ 방송·통신산업

한국 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지만, 현재의 개방 상태를 명문화·영구화할 필요는 있다. 미국의 방송·통신 시장은 이미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상태로 무선통신 부문만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지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간접투자는 지분 제한이 없고 MVNO⁴⁾로 진출이 가능한 상태다.

KT와 SKT를 제외한 통신사업자와 방송채널사업자(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제외)의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이 폐지된 것 이외에는 양측 모두 실질적인 추가 개방이 없는 것으로 합의되었다.⁵⁾ 다만,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방송쿼터)과 ‘개국 쿼터’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합의하였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한국에게 불리한 규제를 신설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미국사업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한국 방송·통신 시장은 포화된 내수시장 때문에 성장 동력이 둔화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시장이며, 이동통신부문은 유럽 등 기타 선진국시장보다 고성장(2000~2004년 연평균 성장률 13.8%)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 및 아시아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로컬사업자를 인수하거나 MVNO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통신시장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바이오신약 시장은 30년 정도 역사를 가진 신생시장으로 생체물질인 단백질, 호르몬, 유전자, 세포 등 그 자체를 약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총칭

4)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는 주파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의 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5) 통신사업자는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 방송채널사업자는 3년 이내에 간접투자 지분제한 폐지

미국 통신서비스시장의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연평균 증가율
유선통신	172.3	167.0	155.9	145.5	136.5	-5.7
무선통신	56.9	68.5	76.5	85.2	95.5	13.8
전체	229.2	235.5	232.4	230.7	232.0	0.3

자료: FCC Study on Telephone Trend 2005.

만일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경우, 3세대 이동통신과 IPTV 등 선진 서비스 부문을 집중 공략⁶⁾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 및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에 있어 미국보다 앞서 있어 향후 대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모바일와이맥스(와이브로)와 같은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 부문에서 양국 통신서비스 업체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미국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만일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되면서 미국업체와 전략적으로 상호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여지도 확대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러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미교포·아시아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방송채널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방송 콘텐츠를 미국에 역수출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6)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은 인터넷과 TV가 결합한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셋톱박스(set-top box)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TV로 방송은 물론 인터넷 검색, 영화감상,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서비스를 제공. 한국은 2006년 말 시범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주요 업종별 기회 요인과 대응 방향

업종명	주요 영향	기회 요인	대응 방향
자동차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제고 • 신제품 개발과 브랜드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픽업 트럭, 환경기술 (하이브리드카), 고급 차종 개발 및 수출(I/O) •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략 (O) • 엔지니어링허브 구축 (I)
기계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기계산업은 원천기술 보유, 가격경쟁력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M&A, 합작기업(Joint Venture) 설립 (O)
섬유	관세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을 통한 수출 제고 • 신소재부문 기술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산업 스트림간 수직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 (I) •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보유한 미국 기업 JV(I/O) 또는 M&A (O) • 유명 브랜드 M&A (O)
제약	특허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약업체의 구조조정 (I) • 미국 바이오제약업체 M&A (O)
방송 통신	미국시장의 추가개방은 없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 •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및 3세대 이동 통신 서비스 시장 진입 • IPTV 서비스 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진출한 미국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 (I/O) • 미국 로컬 기업 인수 (O) • 가상이동통신사업자로 진출(O)

주: I(Inbound)는 국내 시장에서의 전략, O(Outbound)는 미국 시장 진출 전략

5. 결론 및 요약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방의 FTA 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유무역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제조업과 금융 산

업, 'hard economy'와 'soft economy' 사이에 수평적 분업현상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산업을 비롯한 지적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같은 단단한 실물경제를 토대로 성장하지 않을 경우, 부실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얼마나 국가경제와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한미 FTA 협상 출범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한EU FTA도 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 정부의 FTA 추진 전략과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문별 이해득실에 집중되기 쉬운 논의의 초점을 장기적인 국가비전 차원의 논의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

FTA를 이끌고 갈 실질적인 주역은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 등 경제의 주체들이다. 차제에 정부는 50 여개국에 가까운 FTA를 체결할 목표를 수립해 두고 있다. FTA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가지는 많은 개입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과 가계가 시장경제의 긍정적 측면을 향유하고 사회효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FTA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궤도에 진입하기 전에는 관세 인하와 철폐에 따른 세수의 감소, 피해산업에 대한 무역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재정의 확대 등 나름대로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차제에 기업은 FTA를 활용하여 선후발자 사이의 '경쟁력 샌드위치'에 놓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FTA의 명목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5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비'보다 '공격' 위주의 대응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의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내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계와 개인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상 FTA의 최종 수혜자와 피해자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경제하려는 의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국경제는 앞으로 이어질 FTA를 통해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 강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국가 비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